111만 전북인 목소리, 국힘에 전달

김관영 도지사 등, 김기현 당대표에 서명부 전달…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도민 의지 전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범도민 서명부를 전달한 데 이어 16일 서울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 정운천 국회의원,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이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를 만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 촉구 건의문과 범도민 111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식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도민의 목소리가 이번엔 여당인 국민의힘에 전달됐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범도민 서명부를 전달한 데 이어 16일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111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직접 만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설명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현재 28개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상징적인 조항만을 담고 있어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김기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 있는 출범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치권한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관련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바라는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바람이 이 서명부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 역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많은 도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줬다"고 말하고 "지역균형발전에는 여야의 구분이 없다"면서 입법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14일에 이어 여야 지도부에 전달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서명부는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도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의 결과로,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6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해 총 111만 3,594명이 참여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재경전북도민회와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400여 명의 도민과 향우가 참석해서 도민의 의지를 국회에 강력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32개 조문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이어 공청회, 상임위 심사,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재훈 기자

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 국회의원,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윤준병 · 이원택 의원, 김관영 도지사가 이개호 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친전을 전달했다.

"새만금 예산 복원, 한 뜻"

민주 전북 의원들, 이개호 당 정책위의장 만나 친전 전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한병도 · 김성주 · 김윤덕 · 안호영 · 김수흥 · 신영대 · 윤준병 · 이원택)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뜻을 같이했다.

16일 오전,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익산을 국회의원)은 윤준병 · 이원택 의원,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이개호 정책위의장을 만나 친전을 전달하고,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당 차원의 새만금 예산 증액 노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180만 전북도민의 열망이었던 새만금 개발을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복원이 절실하다"라고 밝히며,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정책위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5대 대표예산에 새만금을 포함시켰는데, 말 그대로 보복성 삭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전북 의원님들의 삭발과 투쟁으로 증액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책위가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2024년 정부예산안 평가와 심사방향'을 발표하며,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을 주요 심사 기조로 정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장연국 도의원, '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장연국 도의원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화장실의 변화상을 반영한 목적 내용, △교육감의 책무 및 적극적인 예산 확보 규정 신설,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 · 환경 개선 규정 신설, △불법촬영 금지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되어 규정하고 있다.

장연국 의원은 "화장실은 위생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공간,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변화상을 고려, 기존의 전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화장실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도내 각급학교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 · 환경 개선과 유지 · 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다"고 강조하며, "학생과 교직원 등 화장실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 제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14일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제405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민주 비명계, '원칙과 상식' 출범 선언

"당의 무너진 원칙 되살리고 국민 요구 상식의 정치 세울 것"

김종민 · 윤영찬 ·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도덕성 민주주의 · 비전 회복 제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원욱(왼쪽부터) · 윤영찬 · 조응천(오른쪽 두 번째) 의원과 함께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표적 비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정치결사체 '원칙과 상식'이 16일 출범했다. 이들은 당의 변화를 위한 공동 행동을 예고하는 동시에 당 안팎의 인사들이 함께 연대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종민 · 윤영찬 · 이원욱 · 조응천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며 "당내 패권주의 대신 정당 민주주의를, 내로남불과 온정주의 대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팬덤정치 대신 당심과 민심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선 강한 야당이 돼야 한다며 당의 변화와 결단을 촉구했다. 구체적 방안으론 '도덕성 · 민주주의 · 비전 회복'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의 도덕성은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방탄 정당, 돈봉투 정당, 코인 정당이라는 국민 불신을 그대로 놔두고는 검찰독재를 압도할 수 없다"며 "내로남불에서 벗어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민주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단결은 달라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반영해서 당을 새롭게 하는 민주적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비전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내놓고 선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당내 침묵하는 이들을 향해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원칙과 상식은 그동안 우리들이 개별적으로 밝혀온 입장과 견해가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의 침묵하는 많은 당원들, 지금은 떠났지만 과거 민주당 정권 창출에 힘을 실어줬던 유권자들, 그리고 정부여당의 실정 탓에 어쩔수 없이 현재의 민주당을 지키며 관망하는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고, 향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의견을 내고 학습을 하거나 토론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행동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모임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소위 비명계로 불리는 이들끼리 논의했는데 이제 범위를 넓혀 당내 청년과 고문단을 포함해 생각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에 옮기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출범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먼저 마음이 맞고 의사소통을 해온 분들끼리 발차했다"면서도 "뜻이 같고 고민의 폭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앞으로 시간을 갖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일각서 제기된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이야기해 본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한달 내 당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 수수료 시군 편차 심각"

승용차 기준 전주시 9000원 · 임실군 5만원… 5배 이상 차이
이병도 도의원 "도 차원서 원가 산정기준 마련 편차 상쇄시켜야"

이병도 도의원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1)은 16일 도내 시군별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의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전북도 차원의 원가산정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발급대행수수료는 승용차(페인트) 기준 전주시는 9,000원인데 반해 임실군의 경우 5만원에 이른다. 5배가 넘는 차이다.

주요인으로는 시군별 신규차량 출고수량, 즉 발급건수가 단가 차이의 주요 요인인데, 발급건수는 적은데 대행 제작소 운영 설치기준은 동일하다 보니 원가 자체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현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는 시군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시군은 대행업체 계약체결 시 원가산정기준을 첨부하도록 해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가 나서서 원가산정기준을 통일하다보니 시군간 편차가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는 만큼, 전북도가 나서서 시군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기초의회 정례회

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11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34일간 일정으로 제26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금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이 진행하고 △남원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23건과 시장 제출 안건 24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활동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정례회는 17일부터 27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28일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전평기 의장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시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시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군의회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첫날,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2024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과 장정복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의 ·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 휴회에 들어갔다.

바로 이어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훈)에서는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9일간 전 부서와 읍 · 면, 장수한우지방공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27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수)를 통해 '202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